

'누리과정 어린이집 비용 국가부담으로'

유성엽 의원,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대표발의... "반복되는 보육대란 막고 시·도 교육청 부담 덜어줘야"

정부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한치 양보 없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 유성엽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해마다 정책 시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올해의 경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누리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2조원 수준에서 올해 14조 7천억 원 수준으로 7배나 급증했다.

이번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이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해 정책의 법적 미비함을 보완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



유성엽 의원

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으로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책 시행을 담보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제정안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해당 누리과정 비용 전입,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지 못할 정도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막고 안정

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회계 법안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관영(군산), 김광수(전주갑), 김중회(김제·부안),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정동영(전주병), 조배숙(익산을), 김삼화(비례대표), 김경진(광주북구갑), 송기석(광주서구갑), 이동섭(비례대표), 이용주(전남여수갑),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고민형 기자



대통령 퇴진 촉구 위한 국회의원 대토론회. 국민의당 송기석(왼쪽부터), 정의당 김종대, 이정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민의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설훈, 정의당 노희찬, 더불어민주당 원우식, 무소속 김중훈,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대토론회에 참석해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환 국민의당 사무총장 사의

김영환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민중총궐기 적극참여 방침에 대한 이견이 사의 이유로 꼽히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 및 당내 현역 의원들의 갈등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총장이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집회 참여 여부에 대해 약간의 문제제기를 하고 사퇴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당 차원의 집회 참여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전날(9일) 이당당이 집회 적극 참여 방침을 정한 후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 전에도 호남을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김 총장 거취를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직이 주로 원외 인사들로 꾸려지다보니 현역 의원들과 당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 책임을 김 총장에게 돌리면서 갈등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반기문 축, '귀국 뒤 출마 결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일 "내년 1월 중순 귀국해 현실을 보면서 잘 판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문 총장 팬클럽 반딧불이 회장 김성희씨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팬클럽 창립총회에서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 공관을 방문해 반 총장을 만나고 온 이인구 전 충북도의회 의장의 얘기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장은 당초 이날 창립총회에 직접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불참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오늘 뜻고 전달해달라고 한 내용을 알려드렸다"며 "반 총장은 지금은 유엔에 집중할 것이고 본인이 친박 후보다, 제3지대 후보다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찌됐든 내년 1월 중순 귀국해 한국 정치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고,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지레짐작일 수 있으니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뉴시스

학교운영비 사용 '해외연수' 총체적 부실

양용모 도의원, "선정 절차·심의 등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 삭감할 것"

도내 일부 학교의 교직원 해외연수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교육위원회) 의원이 10일 도내 각급 학교 학교운영비로 다녀온 해외연수가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양용모 의원은 도내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운영비로 다녀온 해외연수에 학교 학칙과 규정이 없을뿐더러, 연수보고서 부실 및 미작성 등으로 운영비를 방만하게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학교 교사들의 해외연수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선정위원회조차 없을뿐더러 학교운영비를 심의하는 학운위에서도 심

의를 받지 않고, 해외연수 선발기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고교의 경우, 학생 해외연수의 경우 학칙이나 학교 규정도 없고, 연수보고서도 불성실하게 작성했으며, B고교는 선정위원회조차 없고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특히, C고교는 몇 년간의 해외연수에 선정위, 학운위 심의, 학칙, 연수보고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립학교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교직원 해외연수도 도마위에 올랐다.

D고교의 경우, 수 명의 교직원이 연수길에 올랐음에도 한 사람의 연수보고서가

마치 학교를 대표하는 보고서로 포장됐으며, 선정기준이 없어 교직원들이 몇 년간 돌아가면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위유성 여행이란 지적을 받았다.

자사고인 E고교 역시, 교직원 해외연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선발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용모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의 학교운영비는 학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도내 교육현실에 이처럼 방만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해외연수에 관한 연수과정과 선정절차, 심의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최순실 특검' 추천권 야당이 쥘 듯 민주당·국민의당 합의... 친박계 반발할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갖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야당이 조율 중인 최순실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 추천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협상해 단수 후보

를 추천하고 이를 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지는 않지만 국민의당은 복수 후보를 추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양당은 상호 합의한 특검 후보 2명을 박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타협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 추천과정에서 배제되는 형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특검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사위 내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반대편을 표명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법안 정안에 따르면 주요 수사대상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문건 유출 등 27개 의혹이다. 수사감사는 30명, 파견되는 공무원 4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심상정 "트럼프 당선 놀랍고 두렵고 언짢다"

"조기대선으로 대한민국호 선장 빨리 바꿔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부당한 공격과 여성에 대해 현명없는 언행을 일삼아 온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놀랍고, 두렵고, 또 언짢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바다 대중의 불안과 좌절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민심에 외면당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은 우리 경제에도 대형악재"라며 "트럼프는 자유무역의 과실에서 소외된 하층 노동자들의 불안과 지지로 대통령에 올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가뜰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국정미비 상태를 이대로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에 의한 현정유린 사태를 어쩔 줄도 없고 갈 수도 없다"며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의교조차 불가능한 대통령을 앞세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는 더더욱 없다"고 박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격랑에 침몰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빨리 바꿔야 한다. 조기대선이 최선"이라며 "정의당이 제시했던 하야선언-과도내각-대통령사임-조기대선이 현정수호와 국가 조기정사화를 위한 최선의 수습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외위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이번 주 토요일 시국대회에 모이는 국민들의 분노에 책임있게 답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강제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뉴시스

"수험생, '순실증'에 괴로워해"

민주당 "노력·성실·희망, 삶의 가치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이번 '순실증'으로 인한 자괴감과 무력감이 공부만으로도 버거운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노력, 성실, 희망이라는 삶의 우선 가치와 사회정의라는 그간의 배움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 산산이 무너진 틈"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변인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점수 좀 잘 받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고교 3학년 학생의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그들만의 리그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이들의 좌절감과 분노 앞에 우리는 언제까지 미안한 어른으로만 남아있을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6년 겨울의 문턱에서 청년들이 묻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는 자신감을 달라"고 하며 "이제 우리가 모두 답할 때"라고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실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국민들 최순실병 앓는 중"

추미에 "새로운 시대변화 정치권이 담아내야"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최순실병을 앓고 있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변화를 정치권이 담아내는 것이다. 새 그림을 그려서 그 설계도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끌고 나가는 한차례 더 높은 정치를 (국민은) 원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그것을 담아내고 제대로 그 뜻을 이해하는 대변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집단, 어떤 개인도 떠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고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의원들 가운데서 총리가 누가 되나, 누굴 선호하나, 어느 당이 총리를 추천할 수 있나 등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활발히 토론을 벌여 어디까지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해야 한다"고 추천절차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떤 정치적 상상과 제안은 이런 문제가 다 풀 어지고 난 뒤에 국민주권 원리에 의해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총리 추천 논의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안민석 "최순실, 독일식 종신형 받을까봐 조기 귀국"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최순실 씨는 독일에 머물 때) 수사를 피해서 허둥지둥 독일 공화도 아니고 영국공화도를 택해 쫓겨왔을 텐데"며 최 씨가 독일 수사당국을 피하기 위해 조기귀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it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독일 수사당국에서 최 씨) 본인에게 수사가 조여 들어오니까 여기에 자금세탁법으로 걸려들면 빼도 박도 못하고 평생 독일에서 감옥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에서 자금세탁을 한 죄는 종신형에 처한다"며 "이것이 최 씨가 왜 예상을 뛰어넘어 조기귀국했을까 하는 의문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독일 검찰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한국 검찰에서 아무런 협조 요청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 검찰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기꺼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텐데 왜 한국 검찰이 아무런 협력 요청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뉴시스

고개 든 친박 "중진협의회 구성하자"

새누리당 친박계는 10일 비박계가 '당 해체'까지 거론하며 지도부 퇴진을 압박하자 "비주류의 행동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를 겨냥, "김 전 대표의 (대통령 탈당) 발언은 국민은 물론 당원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며 "당을 아끼는 여러 사람들의 걱정을 배로 증가시킬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더이상 비주류의 행동은 국민은 물론 당원들의 동의도 얻기 힘들 것"이라며 "구당 중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주장했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당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을 가르고, 당을 더 어렵게 하는 발언들은 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당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를 마음 속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선 이상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파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며 극도로 몸을 사려왔던 친박계가 활동 재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뉴시스